

고령사회의 과제

요즘은 지하철을 타면 경로석이 비어있는 경우가 드물다. 방금 열차에 오른 어르신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지 두리번거리다가 다른 열차 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약간은 떨어진 곳에 기둥을 잡고 서 있기 일쑤다. 몇 년 전만 해도 여유가 있던 경로석이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든 것은 노인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이다.

글. 구철회(청주대 교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는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5천 명인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 또한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로 한정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년의 삶은 그리 평안하다고만 볼 수 없는데, 노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노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해야 한다. 인간이 늙어감에 따라 아픈 곳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노년의 건강유지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는데 노인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비싼 병원비를 우려해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키우다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의료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가족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간병비가 쌓여 간다. 현재 전체인구의 15%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의료비의 40%에 이른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수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층의 불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자식의 교육과 결혼을 위해 전 재산을 사용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가 국민 연금을 1988년에 도입한 이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도 그 10년 후인 만큼, 아직까지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그 액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기초연금 지급은 노령 인구가 늘수록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비용은 젊은층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이 노인혐오와 연결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이제 먼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어르신에게 욕설을 내뱉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 어르신을 구타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패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연장자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어르신이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젊은이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피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공경교육의 강화를 비롯하여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전국 6만 8천여 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신세대 사고방식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노년의 고독 문제다. 고독함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육체적으로 일할 여건이 안 되는 어르신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운동 및 학습 강좌를 들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위에서 언급한 육체 및 정신 건강, 경제, 인권 등 과제의 해결 노력 여하에 따라 고령층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살 만한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떠나고 싶은 대한민국인가. 노후에 평안한 삶을 보내는 유럽의 선진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될 날을 손꼽아기 대해 본다. 